

안전 제일주의를 습관화해야



김 용 수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모든 영역에서 우리 현실을 재조명하여 더한층 발전된 복지국가 건설을 이룩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근래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및 대구 지하철 공사장 현장 가스폭발사고 등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에 있어서는 온 나라가 안전문제로 매우 불안에 떠는 사회로 변해 가정에 서부터 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더욱 요구하게 되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갖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 발전상은 해방 후 6.25참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잘살아 보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좀 더 빨리 남보다 더 먼저 많은 부와 아울러 각자 목표 성취를 하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을 초월하여 노력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더 팔목할만한 국가발전 및 개인의 생활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의 정도와 생활 철학의 결여 등을 갖게 되는 우(優)를 수반하게 되었다.

즉,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과시욕으로 인해 공정한 절차와 엄정한 결과평가를 거부하고 오직 과대 성취만을 가져오겠다는 가치관의 혼돈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병든 풍조로 안전불감증이 모든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기란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법률 및 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바로 고치고 우리의

생활습관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각 부류별로 간략하게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서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토착화될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하여야겠다.

2. 첫째, 가정생활에서의 안전문화

주거환경의 변화로 위험요인이 많은 가스, 전기 및 여러 형태의 위험물질들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가정의 안전에 대해 전 식구의 의도적으로 혹은, 생활습관을 안전의식화에 생활하는 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큰 재난을 불러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가정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 안전교육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급속히 변하여 이에 따른 생활방식이 변하여야 되나 그렇지 못한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재난을 접하게 된다. 위험기계기구의 하나 하나 사용 방법을 확실히 알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물질들이 제규격화에 적합하게 장치되었는지 알아서 전 식

구가 사용상에 혼돈이 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제반 주의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고의 80% 이상이 안전수칙 불이행에 의한 사고 발생이고 기계, 기구 등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극소수에 의해 일어나므로 가정에서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태도·습관의 변화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다.

가정 안전교육은 조그만 일(예 : 가스밸브를 잠그는 방법)에도 주의와 아울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생활태도가 있어야 한다. 한 가정에서는 안전의식 즉, 정리정돈을 하는 공동체의식이 선행되어야 만이 가정의 안전문화가 형성되며, 이것은 곧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의 정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안전의식 교육을 시켜 모든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나 실험을 실행할 때 철저한 안전제일주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태도교육을 하여 사회에 나

가서도 반드시 적당히 일한다거나 안전치 못한 설계나 기계기구 등을 만드는 산업체 인사로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해당 교육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는 일회성이므로 다시 반복이 겹치는 일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바른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안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법률 및 제도면에서의 안전문화

근래에 규제 완화라는 대의명분 하에 사회복지 측면의 안전규제 규정과 사회제도에 상에 필요한 법적 규제 규정을 분별하고 완급을 가려서 규제 완화라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몇년 사이에 규제 완화만이 최선인양 모든 사업장에서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규제조항의 폐지와 아울러 사고예방 대책 방안이 상실되어 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정책의 분별성 결여와 아울러 정부 각 부처의 협조 결여에 의해 더욱 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재해 발생은 우리 역사 이래 최대 참사를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작년(94년도)의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8만 5천9백48명에 이르고, 사망자수만도 2천6백78명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현실에서 안전부재로 얼마나 큰 손실인가.

좀 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자. 산업재해는 각종 산재에 방사업의 시행으로 8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전체 재해자 수는 93년도의 1만7천1백47명 감소에 비해 소폭 감소한 전년 동기대비 4천3백40명이 감소하였다. 사망자 수는 오히려 93년의 2백19명 감소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전년 동기 대비 4백68명(사망자 수 : 2천6백78명)이 증가 되어서 오히려 사망률은 15.72%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인데도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사회복지 측면의 규제를 아무런 보완 대책없이 법적 제도적인 규정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전반에 걸친 안전상의 위기사항을 맞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려면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정부 각부처가 협조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서 국민은 정부를 믿고 신뢰성 있는 제도 확립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엄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업장에서도 각 회사에 적합한 안전조직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사업장의 자율 안전 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예방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가 이루어지리라 하겠다. 또한, 적정한 공기(工期)와 아울러 인적(人的) 구성과 생산비(生産費) 등이 세워질 때에 효과가 있으며, 현재 어느 사업체에서도 당연한 제반 규정을 무시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현상까지 있어 안전불감증에 중독이 되는 현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전불감증의 해독을 풀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제반 규정에 맞는 생산공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산비의 대가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야만 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엄격한 사회복지 규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모두의 사업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지리라 본다.

4.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안전문화

WTO에 우리나라가 가입이 되고 이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 현실성이 국제무대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도 국제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주지의 현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산업체의 제품에서부터 생산방식에 이르기까지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종 다양한 위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위험설비도 결합과 불안정한 행동을 수정한다든지,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 안전문화도 조기에 정착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안전위기 의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행위와 습관은 몇 십년 전과 같이 행동하고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아울러 법률과 제도장치를 잘못 설정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사료된다. 새로운 안전정착을 가져올 수 있

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새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안전하게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ILO협약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새로운 안전기술 개발이 요청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 안전문화도 조기에 정착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안전위기 의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행위와 습관은 몇 십년 전과 같이 행하고 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아울러 법률과 제도장치를 잘못 설정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사료된다.

새로운 안전정착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새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안전하게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제일주의를 몸 에 익혀 습관화하도록 하여 불안정한 행위가 사업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의식의 토착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도 재해 빈발국에서 재해없는 국가로 변신되며 막대한 재해손실도 막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안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계몽과 아울러 정부, 사업체, 국민 모두가 일치되어야 되며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재해가 없는 복지국가 건설에 모두의 참여가 있으리라 보면서 맺고자 한다. ☺